

방산노동자 쟁의행위 금지 노조법 41조 개정 시급

방산노동자 노동 3권 쟁취 결의대회 ... “노조법 41조 2항, 방산사업장 노조파괴법”

방위산업 사업장의 금속노동자들이 ‘온전한 노동 3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가 9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방위산업 사업장 온전한 노동 3권 쟁취를 위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방위산업 사업장 조합원들은 “방위산업체라는 이유로 헌법상 권리를 빼앗겼다”라며 “단체행동을 하지 못하니 매년 교섭은 겉돌고, 단체행동을 하면 사측은 손해배상 소송을 걸고 임금을 가압류한다고 협박한다”라고 토로했다.

조합원들은 “사측이 쟁의권이 있는 민수부문 조합원을 파업을 못 하는 방산부문으로 배치해 노조의 손발을 묶고 있다”라면서 “방산노동자 쟁의행위 금지법은 명백한 노조 탄압 수단이다”라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은 “방산노동자 단체행동을 금지한 노조법 41조 2항이 헌법의 노동 3권을 훼손하고 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시간 끌지 말고 위헌 판정을 내려 방산노동자의 고통을 멈춰달라”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6월 15일 헌법재판소에 노조법 41조 2항의 위헌 여부를 조속히 판단해 달라는 5,752명



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노조법 42조 2항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이다.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는 두루뭉술한 규정으로 쟁의행위를 가로막고 있다.

더욱 심각한 내용은 노조법 시행령인 대통령령에 들어있다. 노조법 시행령 20조는 ‘(방산물자 생산업무 종사자의 범위) 법 41조 2항에서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조립·정비·재생·개량·성능검사·열처리·도장·가스 취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면서 광범

위한 업무를 쟁의행위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금속노조는 올해 손해배상·가압류·방산노동자 단체행동 금지 등 노조법을 개정해 온전한 노동 3권 보장받는 싸움을 해야 한다”라고 선언했다.

홍지욱 부위원장은 “법이 잘못됐다, 고쳐야 한다는 국민의 공분이 모이고 있다. 노조법 41조도 함께 개정하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병관 경남지부 한화 창원지회 수석부지회장은 “노동조합 설립한 지 8년 됐다. 사측은 말로 할 수 없는 극악한 탄압을 한다. 금속노조와 교섭하지 않는다”라며 “단체행동권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 억울하고 분하다. 헌법재판소가 노조법 41조 2항 위헌 결정을 내려 방산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문철상 부산양산지부 SNT모티브지회장은 “단체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은 식물노조를 만들려는 악법이다”라며 “헌법재판소에서 판단 전에 국회가 노조법 41조 2항을 개정하라”라고 강조했다.

삼성 자본, 불법사찰 다시 시작 의혹

삼성전자판매 직원 이혼 여부·개인성향까지 기록... “모회사 삼성전자, 묵인·공유·활용했나?”

삼성전자판매가 노사협의회를 이용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불법사찰을 자행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삼성 자본의 뿌리 깊은 노조 혐오, 불법을 이용하는 노무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금속노조가 정의당과 함께 9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삼성전자판매 노사협의회 불법사찰 적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제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판매의 불법사찰 실태를 고발하고, 삼성 자본에 ▲사찰 중단 ▲사건 조사·책임자 처벌 ▲노노갈등 조장·교섭해태 중단 등을 촉구했다.

지난 8월 3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삼성전자판매 노사협의회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사찰을 자행했다는 폭로가 올라왔다. 삼성전자판매는 삼성전자가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로 백화점, 대형마트, 직영 로드샵 등의 ‘삼성 디지털프라자’ 운영을 전담하고 있다.

블라인드 폭로 글에 사찰자료 일부가 들어있었다. 해당 자료에 직원의 이름, 부서, 직급 같은 기본 인적 사항, 배우자 성격이나 이혼 여부 등 가족 사항, 개인 성향, 연고지 등 생활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삼성전자판매지회는 블라인드에서 일명 ‘X파일’이라 불리는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이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후 추가 제보를 받아 사찰자료 원본을 확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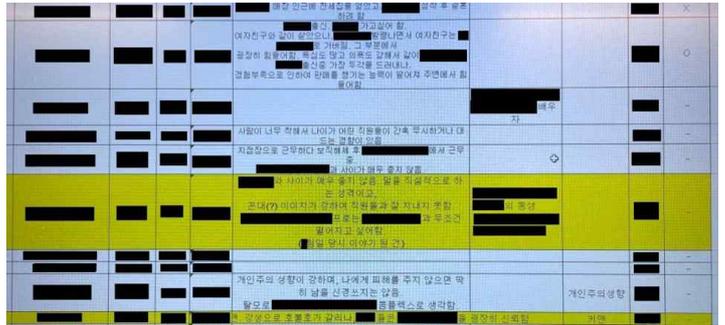
지회는 자체 조사를 벌이고, 3인 이상의 노사협의회 위원이 해당 자료를 작성·보관·회람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판매지회는 “삼성그룹은 노사협의회를 노동자의 자율적인 기구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떤 노사협의회가 이런 문건을 독단적으로 작성·보관·유통하느냐”라며 “삼성그룹이 노사협의회를 이용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사찰 등 범죄행위에 관여하고 있는 듯하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자회견을 함께 주최한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인권침해가 또다시 삼성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개인의 성향은 물론 가족관계 개인사까지 적시한 자료를 회사 안에서 생산했다”라고 규탄했다.

김도현 금속노조 서울지부장은 “삼성은 그룹 차원의 무노조 정책에 기반해 노조파괴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 유죄를 받았고,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기도 했다”라며 “삼성전자가 자회사 삼성전자판매가 이 자료를 만드는 행위를 묵인하거나, 공유·활용했다는 의심을 한다”라고 비판했다.

삼성은 ‘무노조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노사협의회와 근로자 대표를 ‘중추인물’로 활용해왔다. 노사



협의회를 노조 대체제로 운영하면서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 가입을 시도하는 노동자를 회유하거나 감시, 미행, 협박하는 범죄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김용민 금속노조 서울지부 삼성전자판매지회장은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를 믿고 회사 생활에서 힘든 점을 면담하면서 해결방안을 찾으려 했다. 그런데 이런 대화를 모두 기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면서 “노사협의회 몇몇이 뒤집어쓰는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이 사태가 끝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라고 일갈했다.

한편, 삼성전자판매는 9월 23일 이평우 대표이사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회사는 이 문건의 작성과 전달에 관여한 바가 없음을 알린다”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삼성전자판매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해당 문건에 직급, 사번, 사내 가족, 연고지, 최근 발령 여부까지 적시하고 있다. 한 명의 노사협의회 위원이 다른 이의 도움 없이 작성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생각이다”라며 “노사협의회 위원 개인이 이런 민감 정보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설명해달라”라고 요구했다.